

與野 공천 절차 진행... 금주 현역의원 컷오프 윤곽 나온다

與 공천 신청 마감... 847명 접수
설 연휴 이후 지역별 면접 시작

野 신청자 대상 막바지 면접 중
내일부터 종합심사·대상자 발표

여야가 4·10 총선 공천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 이번주에 여야 내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 명단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3일) 지역구 공천신청을 마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엿새간 253개 선거구에 대해 총 847명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서류 심사를 진행해 '부적격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2개 이상 지역구에 공천을 중복으로 신청한 후보는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신(新) 4대약'(성폭력 2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수검표) 실습에서 서울시 서관위 관계자들이 국선 투표지 수검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이나 '4대 부적격비리'(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엔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뇌물, 사기 등의 범죄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된다.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낸 공관위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시작한다. 면접은 일주일 내로 마칠 예정이며, 이후 단수 추천, 우선 추천(전략공천),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컷오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역의원 컷오프는 면접 점수와 함께

당무감사 결과, 당 기여도, 여론조사 등까지 반영한 '교체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7명의 현역의원이 컷오프될 전망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이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경선이 곧 본선'인 영남권 등 내부 격전지에서 컷오프가 나오거나, 전략공천 지역 선정 등에 따라 당내 잡음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당을 떠나 제3지대로 가거나,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는 현역의원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보다 공천 절차를 일찍 시작한 민주당은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막바지 면접 중이다. 민주당은 5일까지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한 뒤, 오는 6일부터 종합심사 및 공천 대상자 등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종합심사 결과 발표에 앞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의원들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하위 10%는 경선 득표율의 30%를 감산하고, 하위 10~20%는

20%를 감산한다. 하위 10%에 포함되면 사실상 경선에서 승산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하위 10%와 감산 대상자 30여명에 포함될 비명계(비이재명계) 비중에 따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으로, 비명계 사이에서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만약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할 경우 이들이 연쇄적으로 탈당해 제3지대로 넘어가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럴 경우 민주당의 원심력은 커지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는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앞서 검증위 단계에서 탈락한 전병헌·유승희 전 의원은 이미 탈당을 선언해 제3지대 합류를 선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역의원들이 제3지대 정당에 합류할 경우, '기호 3번'을 쟁취하기 위한 '합종연횡'이 벌어질 수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문재인 “우리는 ‘명문정당’... 친문·친명 프레임 안타까워”

이재명, 문 전 대통령과 오찬
총선 앞두고 당 통합 의지 보여
문, 당 갈등 우려·부울경 관심 요청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1월 초에 예정됐으나, 이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하면서 미뤄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맞으며, 지난 1월 초 흉기 피습 때 이 대표의 목에 생긴 상처를 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세상이 험악해지고 갈수록 난폭해졌다고”며 이 대표를 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문 전 대통령의 잔에 막걸리를 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안았다. 이 대표는 “정맥만 잘리고 동맥은 안 다쳤다”고 답했다. 정청래·장경태·박찬대·고민정·서영교·서은숙 최고위원과 이개호 당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양산이 지역구인이 김두관 의원 등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신년 인사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당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서울 중·성동구갑에 출마선언을 했는데, 이를 김

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비판하면서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지역구에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던지면서 경선 과정에서 '자객 공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오찬을 하면서 “무엇보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선거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중요하고 그래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해서 총선 승리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 된

힘으로 온 '명문정당'인데, 친이재명과 친문재인으로 나누는 프레임이 안타깝다”며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당내 갈등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고도 했다. 이 밖에 문 전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민심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부울경에도 신경을 써달라”고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동 결과를 알리면서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단결하자’고 했으며 문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통합을 도외시한 현 정국에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을 강조한 만큼 민주당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에게 위임한 22대 총선 비례대표제 방식을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앞으로 꾸려질 선거캠프에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사를 전면 배치하는 것도 이 대표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제3지대, 중텐트 만들었지만... 주도권 싸움에 '빅텐트' 가시밭길

이원욱·조웅천, 독자 노선 예고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66일 앞으로 다가온 4일, 여야국절 끝에 제3지대 신당들이 '중텐트'를 구성했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새로운미래 인제위원장)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이날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공동 창당했다.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이낙연 위원장이 '새로운미래'의 공동대표로 선출됐으며, 그외 지도부 선출은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종민 공동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미래대연합의 이원욱·조웅천 의원은 새로운미래에 합류하지 않

고, 독자 노선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창당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은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도 만들었지만, 통합정당 계획이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전날(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 창당대회는 우리 측만으로, '새로운미래'라는 명칭으로 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고, '미래대연합의 입장 정리를 기다린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결국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원욱·조웅천 의원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이미 지난달 31일 한국

의힘과 합당 절차를 완료해, '중텐트'를 구성했다.

하지만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합치는 '빅텐트'는 멀어지고 있다.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커녕 주도권 싸움만 커지고 있어서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1일 이낙연 공동대표 측을 향해 “(민주당 탈당파가) '유희관'이란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굉장히 실망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제3지대의 빅텐트 구성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거대 양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당 득표율을 얻기 위한 제3지대 빅텐트 정당이 구성돼, 거대양당과 지지율 싸움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 기자

與 “지역 건강·경제 격차 해소에 역량 집중”

총선용 5호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4일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등 지역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역 격차의 핵심 축인 건강 격차와 경제 격차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공공병원 역량 강화 등을 약속했고, 최신 기술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가격적 유인 제공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 정착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한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과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정부와 함께 의대 정원 및 2025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하고,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확충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우선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